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7 대 인권 의제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 천만 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 국제앰네스티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내 허가 안내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amnesty.or.kr

국제앰네스티 이외의 저작권자가 표시된 자료의 경우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2022 년 초판 발행

문서번호: ASA 25/5176/2022
원문언어: 영어

표지사진: 평등세상을 바라는 호소문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소리 활동가가 무지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amnesty.org
amnesty.or.kr

AMNESTY INTERNATIONAL

목차

1.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3

2.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및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4

3. 기후정의 달성 5

4. 북한 인권 증진 6

5.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8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9

7. 사형제 폐지 10

국제앰네스티는 2022 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한국에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를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2019 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여성인권 증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국회는 2020 년 말까지로 주어진 법률 개정에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은 무효화되어 법적 공백 상태에 이르렀다. 2020 년 초에는 이른바 'n 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내 온라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만연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코로나 19 가 시작된 이래 국제앰네스티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기록하고 모니터링 해왔으며, 이들은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차 차별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의 검역 지침은 이들 집단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는 게이클럽이라고 알려진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한 확진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을 공개하여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대두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정부가 취한 조치는 차별적이며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공중 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때, 국가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코로나 19 와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나 해결, 환자 치료 등 합법적인 목적성에 비례해야 하며 비차별원칙에 의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판데믹 상황에서 그 누구의 생명과 안전도 배제하지 않도록 인권을 고려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긴급 대응으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차별 금지와 평등 원칙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을 촉진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을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7 대 인권 의제이다.

1.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및 차별 종식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를 향한 공개적·음성적 형태의 차별이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다.[1] LGBTI 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장벽에 부딪히며, 이로인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고립이 증가하고 있다.[2] 지난 14 년 동안의 시민사회의 결연한 노력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LGBTI 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실패했다.

법원을 통한 법적 성별정정을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는 불임시술을 받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하는 등의 모욕적이고 불필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의 법적 성별정정 없이는 공문서를 취득하거나 필수 서비스 접근에 필요한 공인된 신분증상의 성별 표기를 본인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공문서는 구직 활동 및 주택 매매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또한 계속해서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병리화하며 그들의 군 복무를 막고 있다.[3]

한국에는 민간인의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없지만, 군형법 제 92 조의 6 은 합의된 남성 간의 성행위를 최대 징역 2 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한 직·간접적인 결과로서, 군 복무 중인 LGBTI 병사들은 차별과 위협, 폭력, 고립을 겪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 군대 내 남성간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폐지할 것
- 성별정정 시 정신과진단, 강제적인 불임시술이나 성기재건술과 같은 의학적 치료, 혼인하지 않은 상태나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과 같은 폭력적, 차별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 또한 성별정정이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접근 가능하며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것

---

[1] 국제앰네스티,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국대의 LGBTI",(ASA 25/0529/2019), 2019 년 7 월 11 일, amnesty.org/en/documents/asa25/0529/2019/ko/

[2] Korea Herald, "Discrimination, hatred against trans people 'serious' in S. Korea: watchdog", 2021 년 2 월 10 일, koreaherald.com/view.php?ud=20210210000835

[3] BBC News, "South Korea's first transgender soldier found dead", 2021 년 3 월 3 일, bbc.com/news/world-asia-56268409

- 다양성과 포용을 촉진하고 LGBTI 권리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

2. 여성인권과 젠더 평등 증진 및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한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당사국이다. 지난 2018 년 동 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 및 여성에 대한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한국 여성의 상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메타버스, 암호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과 기술이 등장하면서 범죄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메가바이트급의 클라우드 링크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불법 촬영 및 성착취 자료를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된 해외 플랫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쉽게 퍼뜨리고 구매했다.

한국 사회 내 여성은 공공연하게 성적으로 대상화 돼있으며 이는 여성의 몸이 성적이라는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러한 젠더 고정관념과 국내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는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이른 바 'n 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해 2020 년 4 월 23 일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주도의 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축해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관련 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 피해생존자들이 필요 사항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의 드러났다.

또한 불법 및 비동의 촬영물의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해외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생존자들은 콘텐츠가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유해한 성 고정관념과 같은 여성 차별의 동인을 제거해 성 평등을 촉진할 것
- 여성의 정의 회복과 범죄 신고, 적극적인 사법 절차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할 것, 또한 정의 회복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한 보복이나 2 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온라인 젠더폭력이 국경을 넘어 자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등 민간 부문에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 근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것
-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의 정의를 수정할 것

3. 기후정의 달성

한국정부는 2020 년 10 월 사상 최초로 2050 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해 제 26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감축목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치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며, 감축 계획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해외 평가를 받았다.[4]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0 월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COP26 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2021 년 G20 정상회의에서 2050 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을 선언했고, 2030 년대 탈석탄 달성 목표를 포함하는 COP26 탈석탄 선언[5]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동 선언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탈석탄 동맹[6]에는 불참하였으며,

---

[4] Climate Action Tracker, South Korea, 2021 년 11 월 4, 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2021 년 12 월 31 일 접속).

[5] COP26,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2021 년 11 월 4 일, 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6] 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Members", poweringpastcoal.org/members (2022 년 1 월 5 일 접속).

COP26 개최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 년대가 아닌 2050 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할 것임을 해명[7]하는 등의 모순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부가 명시한 2050 년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너무 늦은 시기이다. 아울러, 정부는 탈탄소화 과정의 영향을 받는 화석 연료 및 기타 부문에 관련된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예로, 한국의 그린뉴딜은 산업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한편,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8]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인정하고, 한국의 인권 의무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즉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
- 탄소중립, 넷제로(Net-zero emissions)가 아닌 '탄소배출제로(Zero emissions)'를 달성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수립할 것
- 늦어도 2030 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석탄 발전을 포함하는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긴급히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
- 기후변화와 탈탄소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고,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4. 북한 인권 증진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 년부터 17 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최근 3 년 동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합의에만 동참했다. 지난 수 년간 한반도에 관한 외교 활동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북한과 관련한

[7]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우리 정부는 청정전원선언을 이행할 것임. 다만, 동 선언 지지가 2030 년대까지 석탄 폐지를 약속한 것은 아님", 2021 년 11 월 8 일, 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80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C%84%9D%ED%83%84

[8] Friedrich Ebert Stiftung, "South Korea's plans for a just transition must be truly fair for all", 2021 년 9 월 30 일, asia.fes.de/news/south-korea-just-transition

한국 정부의 행보는 인권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최근의 국제적 흐름과 상반된다.

국제법상 한국은 북한 주민을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추방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2019 년 11 월 한국 영해에 진입한 북한 남성 2 명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북송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난민지위 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금지원칙'까지 지키지 않았다.[9] 국제사회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다.

2020 년 초부터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전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이는 북한 전역에서 식량, 생필품, 의약품 등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코백스(COVAX)'의 백신 지원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 선택권조차 부여하지 않은 두 개 국가 중 하나[10]로 남아 있다.[11]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향후 한반도에 관한 외교 활동에서 인권 문제가 한국 정부의 핵심 의제로 다뤄지도록 할 것
-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 보완할 것
-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

[9]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 남성 2 명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2019 년 11 월 14 일, amnesty.or.kr/30796/

[10] 2021 년 11 월 기준.

[11] KBS 뉴스, "코백스, 북한에 코로나 백신 128 만여 회분 추가 배정…반입은 안돼", 2021 년 12 월 24 일, news.kbs.co.kr/news/view.do?ncd=5356336

5.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공공 집회는 특정인이나 집단, 기관, 정부 기구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열린다. 따라서 평화적 집회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는 의도된 청자가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개최될 수 있어야 하며, 개최 시간 및 장소, 방식 등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원칙이 아닌 예외가 되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제약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공중보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명백한 필요성이 존재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수단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 이후 각 집회 사례에 대한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개별적인 고려보다, 감염병 예방을 근거로 한 전면적인 집회 금지 경향이 두드러졌다. 2020 년 7 월 서울 종로구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금지 구역을 확대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28 년간 이어져온 수요시위가 사상 최초로 금지되었다. 2020 년 8 월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등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적 판단 없이 모든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성격의 전면 금지는 국제법 및 기준에 위반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서도 집회는 다른 실내외 활동과 비교할 때 더 엄격한 통제 기준이 적용되었다. 2020 년 8 월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에 돌입하며 실내 50 인, 실외 100 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집회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10 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고, 특히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명문화할 것
- 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 조치가 평화적 집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보장할 것
- 국제인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의무에 부합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것. 특히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촉진자로서의 정부 당국의 의무 명시를 포함하고,

시민사회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률의 초안 작성, 검토 및 개정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

2021 년 3 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및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국제사회는 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의 모호성과 함께 과잉 처벌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12]

2021 년 6 월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에 포함된 조항에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그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을 검열하고 압박하며 감옥에 가두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2017 년 11 월 있었던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의 한국에 대한 제 3 차 심의에서 다수의 유엔 회원국은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3 월 한국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개정하여 국제인권법 및 인권기준과 일치시킬 것
- 국가보안법을 개정, 검토 또는 폐지하여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 국가보안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이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체포하거나, 기소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1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2021 년 5 월 17 일, amnesty.or.kr/41338/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할 것

7. 사형제 폐지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무조건 반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로 간주한다.

한국에서는 1997 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형 구형은 계속되고 있다. 2020 년 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사람의 수는 60 명이었다. 한국은 2020 년 말 유엔 총회에서 제 8 차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표를 던지며, 사형 집행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흐름에 동참했다.[13]

2021 년 10 월, 이상민 의원은 30 명의 공동 발의자와 함께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14] 1999 년 이후 지금까지 9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전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현재 사형제도를 허용하는 법령의 합헌성에 대해 2019 년 제기된 헌법소원(2019 헌바 59)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15]

사형제 폐지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를 통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사형제도의 종식을 견인할 것이다. 또한 사형제 폐지는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적 의지 표명과도 같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입법을 가속화할 것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할 것

---

[13] Amnesty International, “UN: Opposition to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grow”, 2020 년 12 월 16 일, amnesty.org/en/latest/news/2020/12/un-opposition-to-the-death-penalty-continues-to-grow/

[1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112795]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30 인), 2021 년 10 월 7 일,

[15] 국제앰네스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2019 년 12 월 (2019 헌비 59), amnesty.or.kr/wp-content/uploads/bcp-attach/Amnesty-International_-Amicus_death-penalty_20191203_ENG.pdf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겪는 불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연락처

issue@amnesty.or.kr

(02) 730-4755

소셜네트워크

www.facebook.com/AmnestyKorea

@AmnestyKorea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7 대 인권 의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판데믹 상황에서 그 누구의 생명과 안전도 배제하지 않도록 인권을 고려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긴급 대응으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22 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후보자는 한국의 국제 인권 의무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문서번호: ASA 25/5176/2022
2022 년 2 월
원문언어: 영어

amnesty.org
amnesty.or.kr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7-POINT HUMAN RIGHTS AGENDA FOR PRESIDENTIAL CANDIDATES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is a movement of 10 million people which mobilizes the humanity in everyone and campaigns for change so we can all enjoy our human rights. Our vision is of a world where those in power keep their promises, respect international law and are held to account. We are independent of any government, political ideology, economic interest or religion and are funded mainly by our membership and individual donations. We believe that acting in solidarity and compassion with people everywhere can change our societies for the better.

© Amnesty International 2022
Except where otherwise noted, content in this document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no derivatives, international 4.0) licenc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permissions page on our website: www.amnesty.org
Where material is attributed to a copyright owner other than Amnesty International this material is not subject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ce.
First published in 2020
by Amnesty International Ltd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K

Index: ASA 25/5176/2022
Original language: English

amnesty.org

Cover photo: *Activist Osori wears a rainbow mask during an emergency press conference to release an appeal for an equitable world*
©Yonhap News Agency

AMNESTY INTERNATIONAL

CONTENTS

1. PROTECT LGBTI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4
2. PROMOT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AND ELIMINATE ONLINE GENDER-BASED VIOLENCE 5
3. ACHIEVE CLIMATE JUSTICE 6
4.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7
5.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7
6.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8
7. ABOLISH THE DEATH PENALTY 9

Ahead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Amnesty International calls upon the presidential candidates to respect, protect, fulfill, and promote human rights for all. The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ublicly commit to meeting ROK'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There is still no anti-discrimination law in Korea, and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including sexual minorities, continues. Despite the significant progress in advancing women's rights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f the Anti-Abortion Law unconstitutional in 2019,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revise the law by the deadline, which was the end of 2020. As a result, the law became null and void. Furthermore, after the so-called 'Nth Room' incident in early 2020, it became clear that online sexua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pervasive problem in the country.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documenting and monitor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marginalized groups and has observed that individuals in these groups suffer from intersectional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their religion,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The government's quarantine guidelines did not fully consider the human rights of these groups.

There was an incident where LGBTI people were blamed for spreading Covid-19 after an individual who visited a gay nightclub was confirmed positive for Covid-19, and the government disclosed the person's contact and location information. In addition, foreign workers living in Korea were forced to take Covid-19 tes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considered th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in these incidents as discriminatory and are violations of human rights.

Public health may be invoked as a ground for limiting certai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order to allow the State to take measures dealing with a serious threat to the health of the population. Such restrictions, however, must be prescribed by law, necessary and proportionate specifically aimed at a relevant legitimate purpose such as preventing the spread of or otherwise addressing a disease like Covid-19, or providing care for the sick, and are implemented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The new president must establish human rights-based countermeasure guidelines and not leave anyone's life and safety behind in the prolonged pandemic. Furthermore, the new president should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to guarantee not only civil and political rights, but als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presidential candidates to commit that they will promote a national agenda founded on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and will guarantee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rges all presidential candidates to pledge that they will lead a government that will make progress in the following areas:

1. PROTECT LGBTI RIGHTS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Both overt and covert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continue in South Korea.[1] LGBTI people face multiple legal,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which increase social exclusion and isolation.[2] Despite a concerted effort by civil society and repeated cal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the past 14 years,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includes explicit protections for LGBTI people.

Transgender individuals seeking legal gender recognition through the courts are required to meet abusive and disproportionate conditions such as undergoing sterilization and not having minor children. Without judicial legal gender recognition, transgender individuals cannot change the gender marker to match their gender identity on their national identification, which is required for obtaining official documents and accessing essential services. These official documents are also necessary to obtain employment and in purchasing housing.

The authorities also continue pathologizing transgender as a mental disorder, which consequently bars transgender individuals from serving in the military.[3]

While there is no law criminalizing civilians' consensual same-sex conduct in South Korea,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continues to be used to punish consensual sexual activity between men with up to two

[1] Amnesty International, *Serving in silence: LGBTI people in South Korea's military*, July 2019 (ASA 25/0529/2019), amnesty.org/en/documents/asa25/0529/2019/ko/
[2] Korea Herald, "Discrimination, hatred against trans people 'serious' in S. Korea: watchdog", 10 February 2021, koreaherald.com/view.php?ud=20210210000835
[3] BBC News, "South Korea's first transgender soldier found dead", 3 March 2021, bbc.com/news/world-asia-56268409

years in prison. As a direct or indirect result of the criminalization of sex between men in the military, LGBTI soldiers experience discrimination, intimidation, violence and isolation.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LEDGE TO:

-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among other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sex characteristics;
-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prohibits and punishes consensual same-sex conduct between men in the military;
- Refrain from conditioning the grant of legal gender recognition to transgender individuals upon abusive and discriminatory requirements such as undertaking psychiatric diagnosis, seeking medical treatment (i.e. forced sterilization or genital reconstruction), prohibition to marry or having children, and that the recognition is made through swift, accessible, and transparent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individual self-declaration;
- Promote diversity and inclusion within their ranks, and publicly signal their support for LGBTI rights.

2. PROMOT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AND ELIMINATE ONLINE GENDER-BASED VIOLENCE

South Korea is a State 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In 2018, the CEDAW Committee expressed concern over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situation of women in South Korea, including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Despite the government's partial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the human rights of women continue to be threatened.

Over the l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 noticeable increase of digital sex crimes as digital technology rapidly develops. Criminality diversifies as new forms of platforms and technologies such as the metaverse and cryptocurrency emerge. The perpetrators used megabytes of cloud links and cryptocurrencies to spread and purchase the illegally filmed content and sexually exploitative materials faster and easier than ever on closed overseas platforms such as Telegram.

The widespread sexualization of women in South Korea also reinforces the gender stereotype that women's bodies are always sexually available. This gender stereotype and the overtly sexualized images of women which are rife in the country are significant factors in the rising cases of online gender-based violence.

On 23 April 2020,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Measures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in response to the Telegram's digital sex crime case revealed as the so-called "Nth Room" incident. These included a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of digital sex crimes and establishing a government-led victim support center to ensure a constant support system for victim-survivors. However, it did not achieve a sustainable emergency response system for digital sexual violence. Moreover, the institutions established to support victim-survivors are often understaffed or lack the expertise to fully respond to their needs.

Additionally, there are no sufficient measures such as cooperation with overseas platform operators to prevent the further distribution of illegal and non-consensual materials online. As a result, victim-survivors continue to be exposed to prolonged physical and mental damage with the constant fear that the content may be distributed again.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LEDGE TO:

- Promote gender equality by eliminating the driver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uch as harmful gender stereotypes;
-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women to access justice, report crime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criminal justice processes,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retaliation against or the revictimization of women seeking recourse in justice;

- Recognize the transnational nature of online gender-based violence, and encoura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intermediaries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 Revise the definition of rape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based on the absence of cons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 rights standards.

3. ACHIEVE CLIMATE JUSTICE

After South Korean government declared the target to achieve net-zero emissions by 2050 for the first time in October 2020, an increased emission reduction target by 2030 was announced at the 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 in November 2021 as part of South Korea's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However, the new reduction target is far below the minimum required to keep global temperature rise below 1.5℃, and the reduction plan was still evaluated as "highly insufficient" overall.[4]

In October, the UN Human Rights Council recognized the right to a "safe,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and decided to establish a Special Rapporteur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rights. The Glasgow Climate Pact adopted in COP26 recognizes the need to ensure just transitions that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radication of poverty,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and quality job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edged to completely phase out coal-fired power generation by 2050 at the 2021 G20 Summit, and also signed a coal phase-out statement at COP26 that includes the goal of achieving a transition away from unabated coal power generation in the 2030s.[5] However, South Korea is not a member of the Powering Past Coal Alliance[6] which the same statement encouraged participation in, and took contradictory steps immediately after COP26, such as the Industry Ministry explaining that the government will phase out coal by 2050, not by the 2030s.[7]

The year 2050 specified by the government is too late to minimize the human rights harm from the climate crisis. Moreover, insufficient steps seem to have been taken so far to ensure a just transition to workers and communities relying on fossil fuels and other sectors affected from the decarbonization process. For example, while mentioning measures to support businesses for industrial transition, the Korea Green New Deal does not specify details for just transition.[8]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LEDGE TO:

- Acknowledge that the climate crisis is a human rights crisis, and immediately raise the NDC target to be consistent with Korea's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the imperative to keep the increase of global average temperature as low as possible and no higher than 1.5℃ above pre-industrial levels;
- Review the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to achieve zero emissions, not carbon neutrality or net-zero emissions;
- Rapidly phase out all fossil fuels, particularly ensuring coal-fired power generation is phased out as quickly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2030;
- Ensure a just transition to all workers and communities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the decarbonization process and establish specific plans to respect rights to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in every step of decision making.

---

[4] Climate Action Tracker, South Korea, 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accessed on 31 December 2021), "4 Nov 2021".
[5] COP26, "Global Coal to Clean Power Transition Statement", 4 November 2021, ukcop26.org/global-coal-to-clean-power-transition-statement/
[6] 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 Members", poweringpastcoal.org/members (accessed on 25 January 2022).
[7]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설명자료)우리 정부는 청정전원선언을 이행할 것임. 다만, 동 선언 지지가 2030 년대까지 석탄 폐지를 약속한 것은 아님", 8 November 2021, 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80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C%84%9D%ED%83%84
[8] Friedrich Ebert Stiftung, "South Korea's plans for a just transition must be truly fair for all", 30 September 2021, asia.fes.de/news/south-korea-just-transition

4.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UN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has been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for 17 consecutive years since 2005. In the past three years, South Korea has only supported a resolution adopted by consensus without being listed as a co-sponsor.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have not been included as priority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diplomatic agenda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past few years. Ra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spoken out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The attitud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engaging with North Korea contradicts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putting the agenda for human rights as a top priority.

Under international law, South Korea should not be deporting North Koreans back to their country where they would fac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vember 201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cibly sent two North Korean men who entered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because they were suspected of being criminals who committed serious crim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t only denied their right to be examined for refugee status as an asylum seeker, but also did no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be concerned that individuals who fail to leave North Korea or face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could be put at risk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even executi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come more difficult than before due to North Korea's border closure,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since early 2020. This meant that the shortages of food, daily necessities and medicines have intensified across North Korea. This particularly poses a huge threat to the lives and safety of vulnerable groups. In addition, North Korea remains one of the two countries around the world[10] that did not even give its people the right to vaccination by rejecting vaccine offers from COVAX.[11] Humanitarian aid is essential to protect the dignity and human rights of many North Koreans facing a serious humanitarian crisis.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LEDGE TO:

- Ensure human rights issues are treated as central and crucial topics in South Korea's future diplomatic activ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 Ensure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re amended and supplemented to prevent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s who arrived in South Korea to countries where fear of persecution exists;
- Cooperate with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humanitarian ai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ns regardless of political disputes in the Korean peninsula.

5.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Public assemblies are held to convey a message to a particular target person, group, institution or government body. Therefore, in order to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ssemblies need to be held within sight and sound of the intended audience, and all restrictions on the time, place, and method of the event should be exceptions, not principles. When restrictions are imposed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y can only be allowed if there is a clear ne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and order, or public health, and when the restrictions mee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nly the minimum means necessary to achieve legitimate interests must be used.

After the spread of Covid-19, ban on assemblies on the purpose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became

[9]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북한 남성 2 명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14 November 2019, amnesty.or.kr/30796/

[10] As of November 2021.

[11] KBS News, "코백스, 북한에 코로나 백신 128 만여 회분 추가 배정…반입은 안돼", 24 December 2021, news.kbs.co.kr/news/view.do?ncd=5356336

arbitrary and disproportionate. In July 2020, Seoul Jongno-gu enlarged the assembly prohibited a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and as a result the Wednesday Demonstration - demanding justice for the sexual slavery run by the Japanese military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 was banned for the first time in its 28 years history. The revision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DA) proposed in August 2020 contained a ban, in principle,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reas where restrictions are imposed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xpressed its opinion that it is undesirable to ban all assemblies without individualized judgements. Blanket bans of this nature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In terms of social distancing measures, stricter control standards were applied to assemblies than other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During the second phase of social distancing in August 2020, events involving 50 or more people indoor or 100 or more outdoor were banned, while assemblies involving ten or more people were completely banned.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LEDGE TO:

- Ensure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in particular, promote an expression in law of a clear presumption in favour of holding assemblies;
- Ensure that measures that restrict th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for reasons such as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such measures do not result in social prejudices against peaceful assemblies;
- Amend the ADA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oblig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o specify the role of government authorities as facilitators of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ensure that civil society and legal experts, among others, are able to ful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when drafting, reviewing, and amending this law.

6.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which took effect in March 2021, prohibits the distribution of leaflets and goods in the border area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ressed concern that the law could unduly limit freedom of expression, pointing to the ambiguity of language of what consist of prohibited acts and the possibility of disproportionate punishment.[12]

The Amendment to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hich was proposed in June 2021, was also criticized by many civil society groups for containing provisions that could unduly infringe on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ere are provisions proposed that allow media companies to be held liable for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for "false and manipulated reports," which are feared to be interpreted arbitrarily due to ambiguous concepts.

The National Security Act (NSA) remains in effect and it has been continuously used as a means to censor and cast a chilling effect on and imprison those who exercised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third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South Korea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November 2017, a number of UN member states recommen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mend the NSA. However, in March of the following year, the Korean government only “noted” the recommendation citing "social controversy" and "social agreement", and the controversy over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NSA is ongoing.

[12] Amnesty International Korea,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 – 국제앰네스티의 접근법”, 17 May 2021, amnesty.or.kr/41338/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LEDGE TO:

-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amend national laws and systems so that they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 Repeal, review, or amend the NSA so that it complie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This law should not be used to harass, intimidate, arrest, prosecute or intimidate those who are lawful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Ensure those who have been unfairly prosecuted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their lawful exerci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re unconditionally and immediately released.

7. ABOLISH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unconditionally for all crimes and calls for its total abolition worldwide. The organization considers the death penalty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ultimate cruel, inhuman or degrading punishment.

Death sentences continue to be imposed in South Korea, although no execution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1997. There were 60 people on death row as of the end of 2020. South Korea joined the majority of countries in 2020 in calling for an end to executions, when it voted for the first time in favour of the eigh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13]

In October of 2021, lawmaker Lee Sang-min submitted a bill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with 30 co-sponsors.[14] There have been nine such proposals tabled to date since 1999, but all previous bills have expired after stalling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Committee. A constitutional complaint filed in 2019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llowing for the death penalty remains pend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15]

By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South Korea would be taking a concrete step towards improv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its own criminal justice system, help forge a path toward the end of the death penalt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importantly, show the country's commitment to respecting the sanctity of life and human dignity.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PLEDGE TO:

- Commute all death sentences without delay to terms of imprisonment, and accelerate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to fully abolish the death penalty which would lead to the ful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law;
- Ratify, without reservations,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3] Amnesty International, "UN: Opposition to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grow", 16 December 2020, amnesty.org/en/latest/news/2020/12/un-opposition-to-the-death-penalty-continues-to-grow/

[14] National Assembly Bill Information System, "[2112795]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30 인)",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K1H1I0C0B7F0V9D2D4H5N7Z1V2N6 (accessed on 31 December 2021).

[15] Amnesty International, *Amicus Curiae Brief of Amnesty International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ember 2019 (2019HunBa59), amnesty.or.kr/wp-content/uploads/bcp-attach/Amnesty-International_-Amicus_death-penalty_20191203_ENG.pdf

AMNESTY INTERNATIONAL IS A GLOBAL MOVEMENT FOR HUMAN RIGHTS. WHEN INJUSTICE HAPPENS TO ONE PERSON, IT MATTERS TO US ALL.

CONTACT US

info@amnesty.org

+44 (0)20 7413 5500

JOIN THE CONVERSATION

www.facebook.com/AmnestyGlobal

@Amnesty

SOUTH KOREA: 7-POINT HUMAN RIGHTS AGENDA FOR PRESIDENTIAL CANDIDATES

The newly-elected president must establish quarantine guidelines considering human rights so as not to exclude anyone's life and safety in the protracted pandemic situation, as well as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that are deferred due to emergency response, especially the right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Amnesty International urges candidates to respect, protect, realize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all people ahead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The presidential candidates must publicly commit to the fulfilment of South Kore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INDEX: ASA 25/5176/2022
FEBRUARY 2022
LANGUAGE: ENGLISH

amnesty.org

AMNESTY INTERNATIONAL